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연대사업국 박원석 : 723-5300)
제 목 도원동강제철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날 짜 1998. 4. 24. (총 2 쪽)

도원동 재개발 지구 폭력사건과 강제철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우리는 오늘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 지구에서 벌어진 강제철거 소식을 접하고 민주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정부하에서조차 백주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데 실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임산부와 어린이등 주민 45명이 외부로부터 고립되어있는 철탑에 불을 지르고 물대포를 쏘는 등 무자비한 강제철거가 벌어졌으며 주거권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던 주민 전원이 연행되었다.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바 있듯 그간 도원동 재개발 지구에서는 주민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묵살하고 진행된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45명의 주민이 단전, 단수 상태에서 폭력의 위협에 시달리며 외로운 생존의 싸움을 진행해 왔다. 지난 3월 27일에는 고립된 주민들에게 식량을 전달하려던 이범휘, 배석호씨가 적준 철거용역원(현 다원 건설)들에게 집단폭행과 방화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로인해 배석호씨는 전신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현재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이다.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한 각계의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오늘 또다시 벌어진 폭력적인 강제철거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수 없다. 특히 지금까지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다 22일 저녁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오늘 새벽부터 공권력을 증강하고 철거에 돌입한 용산경찰서의 태도와 그 배경에 의혹을 거둘수 없다.

강제철거는 폭행, 폭행치사를 포함해 부녀자에 대한 성폭행, 고립, 계층간 위화감 조성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왔으며 철거전문용역의 반인륜성과 폭력성은 이미 여러차례 지적된바 있다. 이번 도원동 철거용역을 맡은 적준철거용역(현 다원 건설)은 그동안 다른지역에서도 여러차례 잔혹성을 드러낸바 있는 악명높은 전문폭력집단이다. 지난 3월 27일 벌어진 적준 용역원들의 이범휘,배석호씨에 대한 폭력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가려 관련자와 배후자 전원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도시 재개발 문제 지역과 도시빈민은 군사정권시대의 무계획적인 산업발전의 폐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들의 주거권과 생존권 유린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왜곡된 경제발전과 소유의 불평등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러한 도시재개발과 철거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 유린은 한국사회가 아직도 얼마나 천박하고 후진적인 발전을 외치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곳곳이 경제난속에서도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때에 더 이상 이같은 개발독재식의 재개발과 강제철거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에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식의 재개발을 권장하고 엄중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재개발지역의 행정기관과 경찰은 보호라는 명목으로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용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철거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순환식 재개발을 선거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공약과는 정반대로 도원동 강제철거에 대해 정부는 철저한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진정 국민의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철거민등과 같은 '그늘진 곳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반인륜적 강제철거의 즉각적인 중단과 주민 주거권 및 생존권의 보장을 촉구하며 이번 도원동 사태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1.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은 진행되고 있는 강제철거계획을 즉각 불허하고 지금까지의 피해와 폭력 사실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고 도원동 주민들에게 사과하라.
2. 용산구청과 삼성건설, 도원동 재개발조합은 강제철거 과정에서 피해입은 주민과 사상자의 치료비를 전액 배상하라.
3. 용산구청과 삼성건설과 도원동 재개발조합은 철거민을 위한 기수용단지를 건설하고 주민과 협상하여 임대주택의 우선적 입주를 보장하라.
4. 정부는 다시 이와같은 폭압적인 강제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조치하며 민주복지사회를 지향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대로 순환식 개발을 입법화하라.

1998. 4. 2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